

# 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 '정조준'

전북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대응 전략·협력방안 논의 부처 방문 등 전방위 대응

전북도는 3일 김관영 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최대 반영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정부 예산편성 순기 상 현재 정부부처 부서단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부처 한도액이 급주 중 통보되어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출년도 결정 이후에는 부처별 지출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기재부는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도는 부처단계부터 중점사업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으로 전방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은 결과 IC(회화·지이엠코리아) 등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최대 이차전지 산단으로 급부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전북 도약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내년도 국가예산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므로, 변함없이 전북 원팀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국회의원이 3년 연속



3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결 소위원회로 활약하며 국가예산 최대 확보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원팀의 정신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아 도민들께 최대의 성과를 보여드릴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날 부처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분야별 핵심사업 30건의 예산반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산업분야 사업으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반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요 7개 사업이 부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푸드테크 분야 선점을 위해 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 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바이오파운드리 국

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의 부처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독려를 요청했다. 또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추진 근거가 마련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 반영 등 7건의 사업이 부처안에 담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으로는 새만금지역 광역 접근성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계획기간 내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와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복지·환경·교육분야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시와 남원시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예산보영 대응 방안과 양질의 전문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예산의 부처 반영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사업 내년도 예산보영과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긴밀한 공조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별 예산편성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체계를 구축,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를 필두로 양 부지사가 4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부처를 비롯해 국회를 찾아 설명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5월 말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대안교육, 공교육 보완 역할”

전용태 도의원, 활성화·지원 정책간담회 “향후 조례 제정·지원방안 검토 예정”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2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제도권 내에서 제공되는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용태 의원의 사회로 대안교육기관 이랑학교 정용갑 대표, 실상사 작은학교 최수옥 대표 교사, 글로벌하담 기독교 흥재영 행정실장과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진아 장학관, 김은옥 장학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여전히 대안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을 제도적 교육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로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며 “이런 편견으로부터 아이들의 선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을 근간으로 한 조례가 전북에서도 만들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아 장학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곳에 여러 지원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담아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재차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의원은 “대안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을 만나보니 마음이 다진 친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친구 등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대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라며 “향후 조례 제정과 지원방안 검토를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文 정부 5년 성과, 1년간 몰라보게 훼손”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 “균형외교 버리면 경제적 타격 우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며 국민의 자긍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문제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지 논의하면 이를 잘 반영해 정책으로 입안하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하고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견과 외교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속설을 한참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의 정상외교의 분위기를 보면 이 속설이 그냥 우스개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

그는 “균형 외교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며 국민의 자긍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느끼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춰있고 남북은 강대국 대치 상황인데다가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 과거처럼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보편화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아주 특수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희귀금속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

##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등 징계 기준 세분화”

오현숙 도의원, 의원 윤리·행동강령 징계 강화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국 최초로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솥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회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



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기준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고 음주운전

과 성폭력, 성희롱에서 전국 최초로 ‘제명’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수수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명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와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